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남녀 건강 불평등 격차 해소 위해 여성 건강정책 개선¹⁾

- 영국 정부가 남녀 건강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 건강 정책을 대폭 손본다. 영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영국 남성보다 높긴 하지만 영국 정부는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여성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 중이다. 본문에서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반 시민과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했던 ‘The Call for Evidence’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소개한 전 생애 접근 방법(life course approach)을 중심으로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살펴본다.
- 여성 건강정책에 여성 목소리 제대로 담기지 않아
 - 영국 건강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1년 12월 23일 남녀 건강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한 보고서 ‘잉글랜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비전(Our Vision for the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여성 건강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 사업 ‘The Call for Evidence’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3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주간 진행된 The Call for Evidence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1) 잉글랜드 16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Let’s talk about it’이라는 설문 조사 2) 여성 건강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일반 시민과 단체들의 서면 의견 수렴 3) 요크대학교와 협력해 잉글랜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담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이 사업에는 14주간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전문가 집단이 400건이 넘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사업에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현 시스템에 개선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University of Bristol) 공공정책 석사

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사업 참여자들은 병원 진료를 볼 때 간호사나 의사들이 여성 환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Let’s talk about it’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만 8,813명 중에서 84%가 병원 진료를 볼 때 간호사나 의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월경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이러한 통증이 ‘정상’이라고 말한대거나, 월경 통증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성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진을 만난 적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0%가 넘었다.
- 둘째, 영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전문가 집단이 전달한 서면 의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여성 건강 정책을 총괄하는 리더 중 여성 건강 전문가와 여성 비율을 높여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데이터 부족이다. 보고서는 “자궁내막증, 폐경 같이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여성 질환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폐증, 심혈관 질환 등 많은 질병 연구가 남성 참가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여성의 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대입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질병 치료에서 질병 예방으로 정책 방향 전환

- 영국 정부 여성 건강 정책을 대폭 손보기 위해 정책 방향을 바꿨다. 기존 정책은 특정 나이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에 초점을 맞추는 질병 중심 접근법(disease-orientated approach)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 생애 접근법(life course approach)을 도입해 여성 생애 전체에 걸쳐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건강 상태를 추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즉, 질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질병 예방에 집중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잉글랜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비전’ 보고서는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 증상이 있는 여성은 임신을 했을 때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면서 “전 생애 접근법을 도입하면 여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예측해 예방하고, 여성 전 생애에 걸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해 여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The Call for Evidence’ 사업을 통해 수집한 여성 의견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여성 환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를 대표해 여성 건강 대사(Women’s Health Ambassador)를 임명해 여성의 목소리를 여성 건강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 지원을 받는 국가 연구를 비롯해 보건의료 연구를 실시할 때 연구 참여자 성비를 맞추는 식으로 정부

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캐롤린 하리스 하원의원은 2021년 10월, 갱년기 여성이 호르몬 대체 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 처방전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갱년기 여성이 호르몬 대체 요법 처방전을 받을 때 한 번만 최대 19파운드 (약 3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1년간 무료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어 환자가 매년 약 205파운드 (약 33만원)를 아낄 수 있다.

- 2021년 12월 발간된 영국 건강사회복지부 보고서 ‘잉글랜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비전(Our Vision for the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의 핵심은 여성 건강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The Call for Evidence’ 사업에는 14주간 1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해 여성 건강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고, 여성 건강 전문가들이 400건 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영국 정부가 질병 치료에서 질병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GOV.UK(2021.12.23.), “Our Vision for the 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42631/dhsc-our-vision-for-the-women_s-health-strategy-for-england.pdf (접속일: 2021.12.28.).
- GOV.UK(2021.12.), “Results of the ‘Women’s Health – Let’s talk about it’ surve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43211/results-of-the-womens-health-lets-talk-about-it-survey.pdf (접속일: 2021.12.28.).
- GOV.UK(2021.12.23.), “Government sets clear ambition to close gender health gap”,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sets-clear-ambition-to-close-gender-health-gap-3> (접속일: 2021.12.28.).
- GOV.UK(2021.10.29.), “More support for women experiencing the menopause”, <https://www.gov.uk/government/news/more-support-for-women-experiencing-the-menopause> (접속일: 2021.12.28.).
- PharmaTimes(2021.11.1.), “UK government to cut cost of repeatable HRT prescriptions”, https://www.pharmatimes.com/news/uk_government_to_cut_cost_of_repeatable_hrt_prescriptions_1382807 (접속일: 2021.12.28.).

영국, 가정폭력법 제정 및 시행 현황²⁾

- 2021년 하반기, 영국에서는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Act)이 제정되었다.³⁾ 본 법

2) 광서희 로테르담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3) 이 법은 폭력, 학대, 위협 등의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domestic abuse’라고 명시하나 본 원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간략하게 ‘가정폭력’이라고 칭함.

의 조항 중에서는 영국 전체가 아니라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만 한정되는 조항들도 있으나, 가정폭력이라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이 법은 폭력적인 행위가 성적, 신체적 폭력 및 폭력을 가하겠다는 협박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언행, 자금이나 재산을 빼앗아 경제적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 또는 다른 어떤 형태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적인 행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나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리벤지 포르노),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는 행위 역시 범죄로 규정하였다.
- 또한 실질적인 가해자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잉글랜드 내 지역 당국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당국은 피해자가 세입자인 경우 임대인-임차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갈 곳이 없는 상황이면 우선적으로 거주공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일반가정의(General Practitioner, GP)⁴⁾에서는 피해자가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피해자에게 수수료와 같은 일종의 금전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해자는 구치상태에서 풀려나는 경우 그 조건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잉글랜드, 웨일즈 내 민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반대신문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마주하여 피해자가 입었던 심리적 위협이나 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법이 제정된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상반기, 정부는 가정폭력 대응 변화(Transforming the Response to Domestic Abuse)를 주제로 공개 정책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200여 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후 2019년 1월, 정부의 공개 협의에 대한 답변 및 가정폭력법 초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123개의 가정폭력 대응 추진 방향 및 피해자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9년 법안(the Domestic Abuse Bill 2017-2019), 이어 2020년 법안(the Domestic Abuse Bill 2019-2021) 단계를 거쳐 2021년 왕실의 최종 인가를 받고 법률로 제정되었다.
-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말 기준 16~74세 성인 약 230만 명이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여성 160만 명, 남성 76만 명). 그리고 경찰에 접수된 각종 범죄 신고 평균 10건 중 1건 이상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 노동당(Labour Party) 소속 이벳 쿠퍼(Yvette Cooper) 의원은 가디언(The Guardian) 지 기고를 통해 이번 법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법에서 명시한 여성과 여아 대상 폭력 대응체계 및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쿠퍼 의원은

4) 영국 및 여러 유럽국가에서 개인은 보통 거주지 근처에 있는 일반가정의(GP)에 등록해두고, 필요한 경우 일반가정을 만나 1차 진료를 받음. 대개 일반가정의의 소견서를 받아야만 전문의나 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존 법 개정을 2021년 초 제안한 바 있다. 그녀는 현 법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 제안 당시 6개월로 사건 접수 유효기간을 철폐하여 피해자가 결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 지난 5년여간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약 13,000여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일반 폭행 사건 기소에 6개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쿠퍼 의원은 이러한 기간 제한이 술집에서 일어난 폭행 시비나 길거리에서 발생한 추행 등의 일회성 사건에는 적절할 수 있겠으나 가정폭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고 다양한데, 가해자가 계속 학대하고 있거나,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는 게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부끄럽게 여겨서 꺼리는 경우, 돈이나 갈 곳이 없어 도망치지 못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쿠퍼 의원은 심각한 신체 상해의 경우 가해자가 기소되지만, 현장 경찰들로부터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적으로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일반적인 폭행 수준으로 격하된다고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 법적 기반 마련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좀 더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차원에서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근절 캠페인을 기획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영국 내무부에서는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철폐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요청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폭력 가해자를 타깃으로 가정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1년 연말 가디언(The Guardian) 측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본 캠페인을 2022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전략을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캠페인의 전반적인 내용이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올해 실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스토킹 관련 피해자 지원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재단 'Suzy Lamplugh Trust'에서 정책 및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스키아 가너(Saskia Garner)는 이에 대해 실행이 중요하지만 캠페인 메시지가 정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같은 캠페인 메시지여도 스토킹 가해자와 다른 유형의 폭력 가해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늦어도 2022년 3월 말까지는 본 캠페인 이행에 착수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단체, 학계, 피해자 지원 분야 관계자 등에게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가해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가정폭력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인식제고 캠페인이 실시되면 영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2021.11.22.), "Policy paper-Domestic Abuse Act 2021: overarching factsheet",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domestic-abuse-bill-2020-overarching-factsheet> (접속일: 2022.1.15.).
- The Guardian(2021.11.07.) "Launch of campaign to tackle violence against women delayed," The Guardian, URL: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nov/07/launch-of-campaign-to-tackle-violence-against-women-delayed> (접속일: 2022.01.16).
- The Guardian(2021.11.19.) "The law is failing domestic abuse victims in England and Wales. But we can change it," URL: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nov/19/law-uk-domestic-abuse-victims-assaults-justice> (접속일: 2022.01.16.).

영국의 가정폭력·성범죄 증인 보호 관련 제도 현황⁵⁾

- 2021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정 진술 대신 녹화 영상의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기존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나아가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같은 결정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 증언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가 입게 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위와 같은 한국의 최근 사건을 계기로, 본 원고에서는 영국의 가정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 증언이나 반대신문 절차에서 증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제도적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비단 미성년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 전반에 관한 내용도 필요한 경우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하반기, 영국에서는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Act)이 제정되었는데, 같은 법에서는 잉글랜드, 웨일즈 내 민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피해자 반대신문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⁶⁾
- 그동안 영국의 가정법원 심리 절차에서 법원이 가정폭력 용의자나 가해자 측이 직접 피해자를 신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가해자를 대면한다는 환경에서 피해자의 증언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0년 6월, 영국 사법부(Ministry of Justice)는 관련분야 전문가 패널을 조직하였으며, 그동안 제출된 증언 관련 데이터와 1,200여 시민 및 기단체가 제출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사법적 신문 절차에서 아동이 연루된 경우 이행해야 할 제도적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는 보고서와 함께 이행전략(Implementation Plan)을 발표했는데, 본 이행전략에서 수립된 내용들이 가정폭력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반대신문 금지 조항(제63, 64, 66절)에 반영되었다.

5) 곽서희 로테르담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6) 본 법은 폭력, 학대, 위협 등의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domestic abuse'라고 명시하나 본 원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간략하게 '가정폭력'이라고 칭함. 본 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동향 2022년 1월 원고 참고바람.

- 작년에 제정된 영국의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용의자 및 가해자 측은 가정법원 기소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 본 법에서는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 측에서 공인된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만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 반대신문 금지 조항은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대면하여 반대신문을 당하거나 본인이 질문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 그렇다면 다른 범죄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 아동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이들은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제도적 보호를 받으면서 증언 및 신문에 참여하는가? 영국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에서는 검찰에서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 보호 지침(Safeguarding Children as Victims and Witnesses)을 공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본 지침은 증언, 법정 방문, 재판 시 대기시간 및 연기, 언론 또는 대중매체의 노출 등 세부적으로 검찰 측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아동을 단순히 나이로만 증언 또는 반대신문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 아동은 개인으로 인정받고 개인별 성숙도나 역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법정에 섰을 때 위축되는 분위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판사, 변호인 등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다루는 특별 조치(Special Measures)도 마련되어 있다.
- 특별 조치는 1999년 제정된 「청소년 사법 및 형법 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에서 법적 절차를 겪으면서 심신이 취약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증인에게서 증언을 받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증언을 취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매우 다양한 세부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특별 조치라는 지침으로 칭하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증인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18세 이하 모든 미성년 아동(기존 17세에서 2009년 18세로 조정됨)은 본 특별 조치에서 정의하는 취약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의 경우, 증인이 성인이거나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자동으로 무조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증인'으로 분류되고 특별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 특별조치에서 증인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법정 내 조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피고와 증인을 분리하기 위해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 증인은 법정 밖 다른 공간에서 증언하고, 법정 내에서는 실시간 방송 링크로 연결할 수 있다. 증언은 법정과 같은 건물 내 공간일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 성범죄 사건이거나 피고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경우, 공개가 아닌 비공개 법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판사 및 변호인은 영국 법정에서 착용하는 가발 및 법복을 벗고 재판을 진행한다.
 - 재판 심리 전 증인이 증언하는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적 이해관계와 충돌하거나 원고의 증언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사전 신청 시 자동으로 허용된다. 또한 증인 반대신문 및 재신문 역시 사전 진행이 허용될 수 있다.

- 지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직접 법정에서 출석해 증언하고 반대신문 절차를 마주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 시점에서 영국의 가정폭력 또는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특별 대상으로 고려하고 법적 절차에서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적 틀은 시사 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Crown Prosecution Service, "Safeguarding Children as Victims and Witnesses", URL: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afeguarding-children-victims-and-witnesses> (접속일: 2022.2.23.).
- Crown Prosecution Service, "Special Measure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pecial-measures> (접속일: 2022.2.23.).
-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2022.01.31.), "Policy paper: Cross-examination in family proceedings factsheet",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cross-examination-in-the-family-court-factsheet> (접속일: 2022.2.23.).

영국, 아동성범죄 방지위한 전략 수립 및 대응 현황⁷⁾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립학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하루에 200건 이상의 아동성범죄 사건이 경찰 당국에 접수된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강간, 온라인 그루밍, 그리고 성추행 등을 포함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총 73,518건 접수되었고, 이는 5년 전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 아동 중에서 8,000건은 14세 청소년으로, 미성년자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연령이다. 12,374건의 성범죄는 10세 이하 아동이 피해자였으며, 449건은 1세 이하 아동이다.
- 아동성범죄 접수기록보다 이 사례들이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다.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5,116건의 아동성추행 사건이 기소되었고, 3,135건의 아동 음란물유포 사건이 기소되었다. 아동성범죄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으로 경찰이 피해를 호소한 아동에게 피해 책임이 ‘문란한’ 본인에게 있으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 이처럼, 아동성범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2019년 6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한가’(How Safe Are Our Children) 컨퍼런스에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을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본문에서는 영국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아동성범죄 예방, 가해자 처벌 그리고 재판과정과 이후의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영국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의 재판 절차지원과 범죄 이후의 전인적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7) 임다혜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시범운영 하는 ‘등대센터’(The Lighthouse)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 (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

- 영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대응 전략’을 2021년에 발표했다. 아동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 사실을 밝혀 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경찰의 범죄기록과 관할구역의 사회 보호 아동에 대한 독립적 감사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해자를 기소하고, 아동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본 전략보고서는 아동성범죄 피해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의 지속성과 질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의 목적은 세 가지다.
- 첫째, 모든 형태의 아동성범죄에 대응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과 해당 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아동성범죄가 기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영국 내무부는 2만 명의 경찰 인력과 1만 개의 감옥 수감 실 확충, 그리고 영국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에 8,500만 파운드(약 1,37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추가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아동 범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Child Abuse Image Database)와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죄접수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점이 경찰과 검찰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토대로,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침서를 제작할 것이다.
- 둘째, 아동성범죄와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 내무부는 근거에 기반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아동성범죄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출소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관련 부처들은 아동성범죄자 관리와 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 셋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모든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보호자들에게 아동성범죄와 대응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질과 효과를 향상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피해 프레임워크’(Online Harms Framework)의 시행을 통해 아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기업에 의무화할 것이다.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연령과 상관없이 재판과정을 전면지원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피해자(vulnerable victims)를 위한 특별 절차를 확대할 것이다.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 동석하면 가해자와의 위력 관계 또는 언어구사력의 한계에 의해 정확한 증언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재판에 동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위험이 커진다. 때문에, 내무부는 2020년에 ‘취약한 증인’(vulnerable witnesses)이 재판 전에 ‘시각적으로 기록된 증언’(Visually Recorded Interviews)를 녹화하거나, 승인된 외부공간에서 ‘실시간 재판 링크’(Live

Court Link)를 통한 증언하거나, 법무부에 의해 등록된 중개인(Registered Intermediaries)의 도움을 통한 증언하는 것이 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확대했다.

- 아동성범죄 피해 아동 재판과정과 성범죄피해 이후의 지원을 위한 ‘등대센터’ (The Lighthouse)
 - ‘등대센터’(The Lighthouse)는 아동성범죄 피해 아동의 의료, 사회적 지원, 심리치료, 형사재판지원 등의 전면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 내무부, 영국 국립 의료제도(National Health System England),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그리고 경찰 및 범죄 시장실(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의 지원으로 바닛구(Barnet), 캠덴구(Camden), 엔필드구(Enfield), 헤링에이구(Haringey), 그리고 이즐링턴구(Islington)에서 2022년 3월까지 시범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등대센터는 아이슬란드에서 1998년에 시행된 ‘Child House’(아동의 집)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동의집은 아동에게 필요한 수요를 전인적으로 조사하고, 아동과 그들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의료 및 사회적 지원, 심리치료, 법적 지원을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여 제공하는 아동 친화적 센터이다. 아동의 집 모델은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도 차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센터이다. 영국에서는 2015년 영국 국립 의료제도에 성범죄 피해 아동의 전인적 지원에 대한 정책요구를 시작으로, 2016년 영국 아동 위원회(Child Commissioner England)에서 구체적으로 북유럽의 아동의 집 모델을 영국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8년 캠덴구에서 등대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섯 개의 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 등대센터는 성범죄 피해 아동뿐 아니라, 해당 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성범죄에 대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고,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여러 전문가에게도 아동성범죄 대응과 피해 아동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등대센터에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의 증거확보’(Achieving Best Evidence)를 위해 아동성범죄 내용을 교육받은 정신의학과 의사가 사전녹화 증언과 외부링크를 통한 재판 증언을 수행한다. 또한, 센터에 소속된 경찰인력이 시범운영되는 구의 법률기관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 등대센터의 시범운영이 2022년 3월에 종료되면, 영국 내무부에서는 아동성범죄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집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 자치위원회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종료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등대센터 또는 유사한 센터 확충을 위해 확보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NSPCC(2020.08.10.), "Child sexual offences jump 57% in 5 years", URL: <https://www.nspcc.org.uk/about-us/news-opinion/2020/child-sexual-offences-rise/> (접속일: 2022.02.20.).
- Mirror(2022.02.01.), "Police blamed child rape victims for their OWN sex abuse, damning report finds", URL: <https://www.mirror.co.uk/news/uk-news/police-downplay-scale-child-sex-26106368> (접속일: 2022.02.23.).
- GOV.UK(2021.01.22.), "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ckling-child-sexual-abuse-strategy> (접속일: 2022.02.20.).
- CPS.GOV.UK(2021.01.), "Live Links", URL: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live-links> (접속일: 2022.02.26.).
- GOV.UK(2019.01.25.), "Ministry of Justic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https://www.gov.uk/guidance/ministry-of-justice-witness-intermediary-scheme> (접속일: 2022.02.26.).
- GOV.UK(2021.09.06.), "Child Sexual Abuse: Child House",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sexual-abuse-child-house> (접속일: 2022.02.24.).
- The Lighthouse, URL: <https://www.thelighthouse-london.org.uk/> (접속일: 2022.02.26.).

독일, 여성폭력 증가에 지속적으로 대책 강화⁸⁾

- 독일에서 파트너 간 발생한 폭력이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협, 신체 폭행, 성폭력 등 폭력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정부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긴급전화(Das Hilfetelefon, 08000 116 016)'에 연락한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파트너십 폭력피해자 수는 2019년 141,792명에서 2020년 148,031명으로 증가했다. 폭력 피해는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폭력 피해자의 80.5%가 여성, 가해자의 79.1%가 남성이다. 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의 37.9%는 전 파트너 또는 현재 파트너였고, 이 외에도 부부 관계나 같이 사는 관계 내에서 폭력이 계속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30세에서 40세 사이 여성의 피해가 가장 컸다. 2020년에는 139명의 여성과 30명의 남성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
- 이는 연방 법무부와 연방범죄수사청(BKA), '긴급전화'가 함께 발표한 2020년 파트너십 폭력에 관한 내용이다. 크리스티네 뢰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많은 여성에게 자신의 집이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매시간 평균 13명의 여성이 파트너 간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2.5일마다 지금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의 폭력 행위로 인해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지원과 폭력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51.2%)은 가해자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었다.
- 2020년 파트너 폭력의 피해자(미수 범죄 포함) 수는 아래와 같다.

8) 채혜원 독일통신원

살인 피해자: 여성 359명, 남성 101명
 고의적 신체 폭행 피해자: 여성 72,013명, 남성 19,199명
 협박, 스토킹, 강압 피해자: 여성 29,301명, 남성 3,721명
 자유 박탈 피해자: 여성 1,567명, 남성 192명
 위험한 신체적 상해 피해자: 여성 12,449명, 남성 5,570명

- 독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파트너 간 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2020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 기간 중 4월에는 전년 대비 2.9%, 5월에는 3.7% 폭력 신고가 증가했다. 이어 2차 락다운 기간이었던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반대로 전년 대비 폭력 신고 건수가 1.5% 감소했다. 이 중 12월에는 3.2%까지 떨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봉쇄조치에 의한 폐쇄적인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기 더 어려워졌고, 외부인이 주변에서 폭력 행위를 알아차리기 더 어려워져서 신고가 줄어들었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 ‘긴급전화(Das Hilfetelefon)’의 2020년 연간보고서 자료는 이를 뒷받침한다. ‘긴급전화’에 따르면 여성 폭력 상담 전화에 2020년 51,000건 이상의 상담 세션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주제는 ‘가정폭력’이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20% 증가했다. 피해 여성들은 위험 상황에서 많은 경우 경찰이나 구조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다.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의 신고도 늘었는데, 이전보다 이웃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변 폭력 상황을 목격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상담 건수도 25% 증가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 경험이 있는 여성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한 상담도 15% 증가했다.
- 2013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 상담은 24시간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화뿐만 아니라 웹사이트(www.hilfetelefon.de)에서 바로 응답이 가능한 채팅,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독일어 외에도 영어, 쿠르드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7개 언어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는 아랍어, 러시아어, 터키어이다.
- 이에 독일 정부는 폭력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를 위해 연방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천만 유로(한화 약 404억 원)를 쓰고 있다. 이 예산은 여성보호소와 전문상담소의 확장과 신축 및 개조를 위해 쓰인다. 이와 함께 여성 보호소와 상담 센터의 디지털 기술과 장비 강화를 위한 혁신 예산도 따로 마련했다. 앞으로 폭력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경찰, 사법부, 여성지원시설, 청소년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00여 명이 e-러닝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대처에 추가 교육을 받고 있다.
- 관련법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238조를 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타인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자에게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지금까지

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주지를 강제로 옮기거나 일터를 바꿔야 했다. 이후 2017년 한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올해 다시 개정이 이뤄졌다.

- 개정된 법안은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해 <타인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속적인’ 행위>에서, <‘경미하지 않게’ 위협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개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조건이었던 ‘심각한 위협’과 ‘지속적인 행위’만으로는 폭넓은 스토킹 범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무엇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다. ‘특별히 중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 친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해친 경우 ▲ 최소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수차례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 타인을 엿보거나 관찰, 염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앱 등)을 사용한 경우 ▲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등이다. 또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및 친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문헌 •

- BMFSFJ(2021.11.23.), <Gewalt in Partnerschaften im Jahr 2020: 4,9 Prozent mehr Fälle als im Vorjahr>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gewalt-in-partnerschaften-im-jahr-2020-4-9-prozent-mehr-faelle-als-im-vorjahr-187202> (접속일: 2021.12.31.).
- Strafgesetzbuch § 238 Nachstellung. <https://dejure.org/gesetze/StGB/238.html> (접속일: 2021.12.31.).
- undesministerium der Justiz(2021.8.17.),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effektiver e Bekämpfung von Nachstellungen und bessere Erfassung des Cyberstalking”, <https://www.bmj.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Cyberstalking.html/> (접속일: 2021.12.31.).
- BMFSFJ(2021.5.10.), “Hilfetelefon “Gewalt gegen Frauen” ist Rettungsanker in Krisenzeit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hilfetelefon-gewalt-gegen-frauen-ist-rettungsanker-in-krisenzeiten-179204/> (접속일: 2021.12.31.).

핀란드 정부, 직장 내 임금 열람 허용하는 법안 추진⁹⁾

- 최근 핀란드 정부는 근로자가 같은 직장 내 동료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임금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직장 측에 의사를 밝히고 본인의 주변 동료들이 받는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기획하게 된 취지 중 하나는 바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감소다.
- 사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1월 첫 업무일, 국민 누구든 원하면 특정 납세자의 수입과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일명 ‘질투하는 날’이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는데, 평범한

9) 락서히 로테르담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본인의 이웃, 직장 동료, 또는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업인 등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을 열람하고 싶다고 국세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비과세 소득, 기업 소득 감면 같은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인 연수입, 금융 자산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사 기자들은 한 해 동안 가장 수입이 높았던 사람, 유명인사의 소득 등 정보를 열람하고 보도하기 위해 정보열람이 가능한 날 이른 아침부터 국세청 앞에 긴 줄을 형성하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 매우 사적인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정부는 투명성이라는 가치 차원에서 매년 11월 이와 같은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투명성 제고보다 가십거리, 심리적인 경쟁심 유발 혹은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 최근 발표한 핀란드 정부의 법안 추진 계획의 경우 위 소개한 소득열람 및 공개는 1년에 한 번, 이벤트와 같이 매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지속적으로 같은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이 차별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OECD에서 발표하는 성별 임금 격차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17.2% 임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19년 데이터 기준), 하위권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들 평균 12.5%보다도 높다(2019년 데이터 기준). 노르웨이 8위, 덴마크 9위, 스웨덴은 12위로,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핀란드의 남녀임금 격차 문제는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핀란드 내 평등 옴부즈맨(Finnish Equality Ombudsman) 2018년 보고서는 남녀임금 격차 문제의 원인으로 성별 직종분리 경향이 아직 만연하다는 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다는 점, 여성이 승진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은 점 등을 지적했다.
- 2016년부터 핀란드 정부는 고용주연합회, 노동조합들과 협력하여 평등임금프로그램(Equal Pay Programme)을 추진해 왔다. 평등임금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성별에 기반을 둔 직종분리 지양, 성별 임금 격차 감소, 임금 지급 시스템 개선, 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에는 1986년 제정되고 2016년 개정된 「남녀평등법」(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이 있으며 본래 법 테두리 안에서 남녀 고용 및 임금에서의 평등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제정되는 데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발표된 뒤 노동조합, 고용주 연합회 양측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 비판 배경은 다소 상이한데, 우선 노동조합들은 현 법안보다 강력한 임금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용주 연합회는 현 법안이 직장 내 갈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노동조합들과 평등 옴부즈맨 측은 이미 지난 세번의 정부 임기 동안 충분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한 노동조합의 대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태도와 문화를 바꾸게끔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번 법안이 상정된 이후 핀란드의 주요 고용주들이 회원으로 있는 연합회인 핀란드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EK)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의회 내 임금 투명성 실무회의(working group)에서 탈퇴했다. 핀란드산업연합회는 핀란드 내 경제단체 중 가장 큰 단체로, 20여 개 연합, 15,300여 개 기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중 96%가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회원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만 9만여 명에 달한다. 산업연합회의 한 선임 법률고문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개인 근로자의 임금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면 근로문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5개 정당 연합정부로 조직된 핀란드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다. 토마스 블롬퀴스트(Thomas Blomqvist) 평등정책 장관(Equality Minister)은 한 언론사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주요 중점방향 중 하나가 불평등한 임금 격차 감소”라고 밝히며, 2023년 4월 선거 전에 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법안 초안이 마련된 이후 여러 이견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계속 계획되었던 세부적인 절차 추진이 연기되고 있다. 블롬퀴스트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핀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직장 내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 열람 허용은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기업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따라서 투명성 제고 및 임금 격차 해소라는 대의와 개인정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고용주, 노동조합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핀란드산업연합회, EK), <https://ek.fi/en/> (접속일: 2021.12.21.).
- OECD, "Gender wage gap,"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접속일: 2021.12.21.).
- Reuters(2021.11.11.). "Finland plans to let workers see colleagues' salaries to close gender pay gap,"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land-plans-let-workers-see-colleagues-salaries-close-gender-pay-gap-2021-11-11/> (접속일: 2021.12.21.).
- The New York Times(2018), "Happy 'National Jealousy Day'! Finland Bares Its Citizens' Taxes," (접속일: 2021.12.21.).
- <https://www.nytimes.com/2018/11/01/world/europe/finland-national-jealousy-day.html>
- Yle(2021.11.12.), "Union calls for salary transparency to tackle Finland's gender pay gap", <https://yle.fi/news/3-12186025> (접속일: 2021.12.21.).

미국, 직장 내 젠더폭력 현실과 법제도 현황¹⁰⁾

- 최근 미국에서는 주목할만한 일이 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직장 내 법률적 변화라고 일컬어지는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의 중재 조항 종결” 법률(the Ending Forced Arbitration of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ct)이 2022년 2월 의회를 통과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률은 피해자 개인이 법정을 갈 것인지 아니면 중재위원회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피해자가 고용주에 대해 소송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률을 소개한 길리브랜드(Gillibrand) 상원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고용주 및 기업들이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NPR, 2022). 또한 그는 이 법을 통해 “가해자에게 주어졌던 제도적 보호가 사라질 것”이라 밝혔다(Washington Post, 2021). 이 법률에 따른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율이 남성보다 불균형적으로 높다고 한다. 미국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살인을 제외한 41,560건의 직장 내 폭력이 발생했고 직장 내 폭력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3.5%였다(BLS, 2019). 또한 전국 피해자 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Report)에 따르면 직장 내 폭력 중 강간이나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NCVS, 2011).
-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 중에서 경찰, 변호사, 혹은 판사 등에게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직장 동료, 가족, 친구 혹은 주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 및 차별을 경험한다.
- 2차 피해를 가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 피해자를 피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시키거나, 피해자를 탓하거나 혹은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방식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의 양갈음을 받는 형식의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 개인 특성 및 피해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피해자가 겪는(어떤 경우는 처음 폭력 피해보다 더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다(Carrera-Fernández et al., 2021).
-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들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제정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여성의 직장 내 폭력 피해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법」 및 「민법」 아래 보호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데 있어 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조건(예: 작업장의 최소 고용인 수, 민원 제기 가능 기간, 고용주에게 피해 사실 고지의무 등)에 맞지 않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의 대법원이 기업이

10)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고용인에게 개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손을 들어주면서 많은 고용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Washington Post, 2021).

- 한편에서는 연방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애물들로 인해 직장 내 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State)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 내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뉴욕 그리고 오레곤 같은 몇 개의 주에서는 주법(state legislation)을 통해 여성의 직장 내 폭력 피해 및 2차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리노이(Illinois)주는 성폭력 피해자나 고용인의 가족이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그들에 대한 어떠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작업 일정을 바꾸거나 사무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한다. 오리건주도 비슷하게 고용주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고용주가 실행하기에 사업의 운영이 어렵거나 손실이 너무 큰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안전 편의를 제공해야만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직장 내 감독자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훈련, 고용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를 위한 자원 제공, 핫라인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 이렇게 주에서 실행되는 법의 경우는 연방법이 제한해 놓은 작업장의 최소 고용인 수 같은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각자 사업장별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할 뿐 아니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AFL-CIO, 2017).
- 위에서 언급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처럼 직장 내 성폭력 의무 교육과 같은 정책을 기업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의무 교육이 얼마나 젠더폭력 및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또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젠더폭력 및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회 인식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를 수 있는 성과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 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도 젠더 피해 감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미투운동(MeToo movement) 이후로 많은 젠더폭력 피해 여성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기 경험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알리기 시작하면서 제도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사회적 관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평가되고 있다(Rhode, 2019).

• 참고문헌 •

- Aflico(2017.03.13.). "Ending Gender Based Violence in the World of Work in the USA". URL: <https://aflicio.org/sites/default/files/2017-04/Ending%20Gender%20Based%20Violence%20in%20the%20World%20of%20Work%20USA%20Report%20%28002%29.pdf> (접속일: 2022.02.14.).
- NPR(2022.02.10.), "Congress approves bill to end forced arbitration in sexual assault cases", URL: <https://www.npr.org/2022/02/10/1079843645/congress-approves-bill-to-end-forced-arbitration-in-sexual-assault-cases> (접속일: 2022.02.14.).
- 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2011.03.). "Workplace violence 1993-2009", <https://bjs.ojp.gov/content/pub/pdf/wv09.pdf> (접속일: 2022.02.14.).
- The Washington Post (2022.02.13.), "Opinion: Distinguished pol of the week: A major civil rights win",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2/02/13/gillibrand-sexual-harassment-arbitration-ban-a-big-win/> (접속일: 2022.02.14.).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08.06.). "Homicides and other workplace assaults by gender in 2019", URL: <https://www.bls.gov/opub/ted/2021/homicides-and-other-workplace-assaults-by-gender-in-2019.htm> (접속일: 2022.02.12.).
- Carrera-Fernández, M. V., Almeida, A., Cid-Fernández, X. M., González-Fernández, A., Fernández-Simo, J. D.(2021). Troubling Secondary Victimization of Bullying Victims: The Role of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3.
- Rhode D(2019) #MeToo: Why Now? What Next? *Duke Law Journal*, 69, 377-428. <https://www.hsdl.org/?view&did=821878>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내*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모형 개발’ 주제로 토론회 개최
 - 토론회는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임위원회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초 자료와 분석역량을 축적할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2.1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28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2.1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295

여성친화도시 8개 지역 신규 지정

- 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8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올해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21개 지역을 재지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 등 8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16개 지자체가 재지정되었고,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2.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298

「내 손으로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정책과제 대국민 공모

-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관행과 성별 고정관념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내 손으로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정책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 공모 대상은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 등에서 겪는 성별에 따른 차별 또는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이며,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2.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308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목표를 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② 성 기반 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③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④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로 설정
 -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과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각각 분석, 발표할 예정이며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고충·노무상담, 기업 자문활동 등) 강화
 -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 확대
 -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2.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1.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343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

-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고지 열람 시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1.1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359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확대 지원
 - 올해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
 -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1.1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360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 지정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8개 지자체 및 재지정 21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 수여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수는 2009년 2개에서 2021년 95개까지 확대됐으며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난 광주 동구·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1.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377

제9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제9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취업자가 20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여성 고용률(57.7%)이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57.8%)에 거의 근접했다고 발표
 - 20~29세 여성 고용률(59.6%)은 전년대비 2.8%p 상승했으나 취업자는 상용직(+56천명) 외에 임시직(+52천명)에서도 크게 증가했고, 35~39세 여성의 고용률(57.5%)은 전년대비 1.1%p 감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1.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382

21년 지자체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에서 3년 전보다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됐다고 인식
 - 인사, 직무배치, 일·생활균형, 성희롱 예방 등 전반에서 조직의 양성평등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개선(3.37점)된 것으로 인식됐으며 여성 관리자(5급 이상) 비율은 광역 22.0%, 기초 24.4%로 나타남.
 - 한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성별 균형 부서는 30% 미만(광역 28.5%, 기초 26.1%)이며, 공식적·비공식적 업무에서 성별 분리 관행은 여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1.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38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67명 적발

- 여성가족부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67명 적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 대상 인원은 2021년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67명으로 전년 대비 15.1% 감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2.0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PkCvygJi9o8hrGIORFS-Sn6y.mogef10?mid=news405&bbtSn=708401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취업 지원 강화

- 정부는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과 「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심의·의결
 - 전국 새일센터에서 지역의 구인수요 및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가족센터의 취업전문기관 연계 기능 강화
 - 2022년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개 가족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부모교육 및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2.0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PkCvygJi9o8hrGIORFS-Sn6y.mogef10?mid=news405&bbtSn=708408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노력

- 여성가족부는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2년도 시행계획(안)」 서면 심의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성별, 세대별, 지역별 참여 확대, 양성평등교육 체계화, 미디어 등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 계획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의 질적 개선 추진
-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을 추진하여 기존의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복지 분야는 고용, 소득 영역으로, 가족 분야는 돌봄 영역으로 개편하고, 사회의 주요 측면인 의식 중요성을 반영하여 성평등(젠더) 의식을 신규 영역으로 설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2.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IXaz59jE+7vv79sXl4uwcC-3.mogef20?mid=news405&bbsSn=708416

아시아 지역 최초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 출범

- 여성가족부는 우리 정부와 유엔여성기구 간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유엔위민 성평등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서명·교환 절차 완료 공표
- 유엔위민 성평등센터는 성평등 의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유엔기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폭력 근절 △여성·평화·안보 △인도주의적 행동 및 재해 위기 경감 △성별 통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교육 훈련, 협력 및 교류 관계 구축 등의 기능 수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2.2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HSwDyUn1Au5U4zGivOM3vwNR.mogef20?mid=news405&bbsSn=708430

온라인 매개(플랫폼) 일자리 성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는 ‘제10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함.
-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0만 명, 이 중 여성이 46.5%로 분석
- 기존 고용시장의 특징인 성별 소득 격차와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플랫폼 노동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2.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HSwDyUn1Au5U4zGivOM3vwNR.mogef20?mid=news405&bbsSn=708437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위한 결정 지원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한 결정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 등 논의
- 회의에서는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 중점 논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2.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43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 개최
 - 심포지엄은 새로운 보건복지 체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2.15.]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68926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이행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이행점검회의 개최
 - 각 부처 소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과제의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공유하였고, 현장에서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의 과제들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2.1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8975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 방안 마련
 - 외국 입법례로 재판 전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 논의 [법무부 보도자료, 2022.01.05.]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1MjM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권고안으로 발표
 - 현행법에 규정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및 증거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 미비로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조치가 미흡하거나 재판부별 편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재판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 [법무부 보도자료, 2022.03.02.]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2ODE3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추가하고, 성범죄 대응 지침서를 제작·배포하여 신속하게 성범죄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직통전화(Hot-Line)를 설치·구축,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들을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절차 및 사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 [법무부 보도자료, 2022.03.07.]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3MDI3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국방부]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활동 시작

-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 2022년에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 과제를 점검·이행하고, 「2023~20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예정 [국방부 보도자료, 2022.02.21.]

• 참고문헌 •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l_669&newsSeq=l_12789&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제3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국방부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6명을 위촉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이행, 복무와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이번 3기 위원에 민간위원 6인 중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위촉 [국방부 보도자료, 2022.02.25.]

• 참고문헌 •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l_669&newsSeq=l_12796&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고용노동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고용노동부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벨일자리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12.27.]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3104

